

금융위 “금융중심지, 전북 추가지정 없다”

“하마터면 유탄 맞을뻔”... 지방이전 한숨 돌린 국책銀

추가지정 없이 내실화에 집중
“중심지 선정, 해외기관 유치 목적”
부산, 선제적 이전 추진 가능성



왼쪽부터 산업은행 본점, 수출입은행 본점.



/각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 금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무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혹여나 금융중심지로 집중하겠다는 부산에 이전되는 것이 아닌지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없이 서울과 부산 등 현재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금융중심지와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곧 금융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부

의 금융중심지 선정은 그곳의 인프라를 통해 다양한 해외기관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금융중심지 선정으로 한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국내 금융기관을 이전시키는 제로섬(Zero-sum game)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금융중심지에 공공기관 및 국책은행이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들은 한숨 돌린 상황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정부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이 지방으로 흩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용과 시간 등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야 실제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이 이뤄지기 전에 부산이 선제적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며 “금융중심지와 금융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별개라고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최근 새로운 10년 금융중심지 추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금융관련 공공기관 9곳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 금융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이상 금융위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상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투자공사(기획재정부 산하),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산이 국내 금융공공기관 이전보다 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한다고 지적한다.

김동헌 고려대 교수는 “주요 금융중심지 성장전략에는 예외 없이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이 있었다”며 “부산의 경우 일정한 조건과 세제혜택기간이 5년으로 짧아 외국 기업에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영미법 계통의 사법체제도 따르고 있지 않아 국내에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부의 법제도와 정책 개선, 인력과 예산이 우선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중심지’ 무산에 전북 정치권 반발

전주갑 김광수 의원 오늘 기자회견
“총선 앞둔 부산·경남 눈치보기” 비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 결정을 두고 전북 정치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는 총선을 앞둔 ‘부산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당 원내총무(전북 전주갑)는 15일 제3금융중심지 보류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는 지난 12일 전북 지역이 추진한 제3금융중심지 프로젝트에 대해 “종합

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을 만들고, 농업생명산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보류 판정된 것이다.

추진위가 이같이 판단한 근거는 ▲국제 금융중심지로의 발전 여건 부족 ▲정주여건 부족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제시 부족 ▲금융 미래에 대한 비전 부족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북 혁신도시에는 금융중심지로서 위상

을 가질만한 금융회사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유일하다.

또 정주여건의 경우 기금운용본부의 우수 인력이 퇴사하는 등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국제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선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이전하고 집적화할 정도의 종합적 생활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추진하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도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부는 농생명과 금융을 기계적으로 연계, 농업 관련 금융회사인 농협 본점이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김광수 민주당 원내총무. /연합뉴스

나온다. 다만 보고서는 “농업생명산업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금융 미래에 대한 향후 계획도 제시

해야 한다는 평가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북 지역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가 도민을 우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보류 결정은 사실상의 반대”라며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전북도민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도민 앞에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은 선박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인 반면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산운용형으로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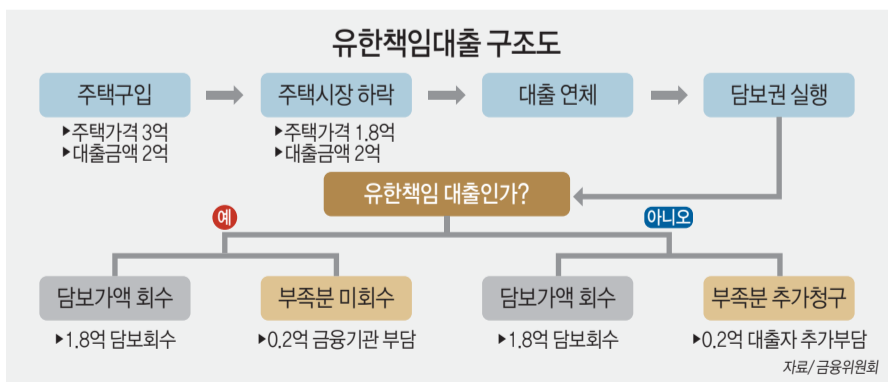
주택값 내려도 집값만큼만 책임... 유한담보대출 은행에 혜택

소비자 보호 상품 취급하도록 유인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 예정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제공하는 은행에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금리리스크 감감 부담 대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에 대해서도 출연료를 낮게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에 한정했던 유한책임대출을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이 하락



하더라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회수가 없고, 대출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더라도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만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유한책임대출로 제공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대비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를 감면(최대 0.03% 포인트)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은 주택가격 하락등에 따른 위험 발생시 차주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며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美 1~2월 소매 판매 감소... 점차 개선될 것”

日기업 경기인식 악화·中 대외개방 지속

최근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다. 일본은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악화됐고, 중국은 대외 개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미국의 소매판매는 지난해 4분기 전년 대비 0.2% 증가에 그친 데 이어 올해 1~2월에는 감소(-0.5%)로 전환했다.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소비지출의 경우 올해 1월 중증가세 둔화폭이 확대됐다. 한은은 “최근의 소비지표 부진은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며 “양호한 고용 및 소득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본의 3월 단기 경제 관측조사 결과 기업의 전반적인 경기상황 인식을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가 지난해 12월 조사

(16%포인트)에 비해 12%포인트로 확대됐다. 기업들의 경기인식이 악화됐다는 의미다.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분쟁 우려 영향으로 제조대기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이번 업황판단지수가 예상보다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제조대기업의 경우 1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하락하며 2012년 12월(-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의 개방요구, 금융개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올해 들어 금융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1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5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로 상향했다. 또 지난해 11월 외국계 증권·보험·카드사에 이어 외국계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했다.

/김희주 기자